





# 김근태씨 고문 국가배상 판결

## “가혹행위 인정 4천5백만원 지급하라”

### 서울 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30일 경찰수사과정에서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김근태(46·북역중)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게 고문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김씨에게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소송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3면>

이번 판결은 86년 10월7일 김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지 5년3개월여 만에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85년 9월 서울 용산구 갈월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20여일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이근안 경감 등 수사관

1992. 01. 31

들로부터 물고문·전기고문·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과, 같은해 12월 고문으로 생긴 발뒤꿈치의 상처막지를 교도관들이 빼앗아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관들이 김씨를 이틀 동안 구속영장 없이 강제 구금하고 구속영장 발부 뒤에도 김씨에게 이를 뒤늦게 제시하는 등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영장 집행절차를 어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 제한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증거 인멸과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가족면회를 금지하고, 김씨의 진술을 받기 위해 계속 검찰청에 소환해 결과적으로 변호인과의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가는 원고가 청구한 5천만원 가운데 변호인 접견 제한부분을 제외한 불법 구금 고문 증거인멸 등 나머지 불법 행위로 김씨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배상금으로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김씨를 고문했던 김수현(59·당시 경감)씨 등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관 4명은 88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뒤 지난해 1월3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 5~2년씩의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91. 1. 31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46)를 고문한 경찰관 4명에게 지난해 1월 30일 유죄가 선고된지 1년 만인 30일 김씨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도 고문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85년 9월 4일 김씨가 서울 대법원 제1부에서 조중현(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당시 수사관) 등 4명에게 불법구금된 사실을 폭로하고 86년 1월 30일 유죄가 선고된지 1년 만인 30일 김씨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도 고문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85년 9월 4일 김씨가 서울 대법원 제1부에서 조중현(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당시 수사관) 등 4명에게 불법구금된 사실을 폭로하고 86년 1월 30일 유죄가 선고된지 1년 만인 30일 김씨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도 고문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 記者的 눈



이근태의 배상  
【辛允錫 사회부 기자】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46)를 고문한 경찰관 4명에게 지난해 1월 30일 유죄가 선고된지 1년 만인 30일 김씨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도 고문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85년 9월 4일 김씨가 서울 대법원 제1부에서 조중현(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당시 수사관) 등 4명에게 불법구금된 사실을 폭로하고 86년 1월 30일 유죄가 선고된지 1년 만인 30일 김씨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도 고문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46)를 고문한 경찰관 4명에게 지난해 1월 30일 유죄가 선고된지 1년 만인 30일 김씨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도 고문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85년 9월 4일 김씨가 서울 대법원 제1부에서 조중현(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당시 수사관) 등 4명에게 불법구금된 사실을 폭로하고 86년 1월 30일 유죄가 선고된지 1년 만인 30일 김씨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도 고문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 국가가 4천5백만원 지급

## 서울민사지법 10여차례 고문사실 인정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高鉉哲)는 30일 전민정련의장 金權泰씨(46·구수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金씨가 수사관들에게 고문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로 金씨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인격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지난 85년8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돼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물고문·전기고문·구타등10여차례에 걸쳐 고문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로 金씨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인격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판결했다.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가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고문을 범하지하고 형사피의자의 친위 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제12조2항)에도 위반된다며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피의자의 인의동행은 허용될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사후 구속영장제시도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金씨가 지난 86년10월 소송을 제기한 뒤 5년3개월만에 내려진 것으로 金씨는 현재 사건 외에 90년 전민련 결성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하고도 소에 수감되었다.

日字: 1992. 1. 31 所載: 7

# 金權泰씨 고문賠償판결

日字: 1992. 1. 31 所載: 2

## 拷問적결 司法府 강한의지

### 金權泰씨 국가배상판결 의미

30일 법원이 전민정련의장 金權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수사관들을 내린 것이 원고수사관의 고문을 가혹행위인 대해 국가배상을 다스리려는 강직한 의지로 불수 있다.

판결문의 인용 자항목과 고문을 내지 않았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고문행위를 국가가 인정했다는 것은 국가가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고문을 가혹행위인 대해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것이 원고수사관의 고문을 가혹행위인 대해 국가배상을 다스리려는 강직한 의지로 불수 있다.

## 5共 3대人權유린 「法的 마무리」

최초로 金씨가 수사기관의 고문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은 「고문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고문사실의 인정과 배상판결의 의미를 두고 있다.

판결문의 인용 자항목과 고문을 내지 않았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고문행위를 국가가 인정했다는 것은 국가가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고문을 가혹행위인 대해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것이 원고수사관의 고문을 가혹행위인 대해 국가배상을 다스리려는 강직한 의지로 불수 있다.

판결문의 인용 자항목과 고문을 내지 않았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고문행위를 국가가 인정했다는 것은 국가가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고문을 가혹행위인 대해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것이 원고수사관의 고문을 가혹행위인 대해 국가배상을 다스리려는 강직한 의지로 불수 있다.

分類: 703

〈梁基大〉



# 고문피해 국가배상 '상식' 확인

1992. 01. 31

## 사법부 김근태씨 승소판결 의미

법원이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4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법치국가에서 고문은 반드시 처벌돼야 하고 공권력에 의한 가혹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는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공의 대표적 인권사건으로 꼽히는 권인숙씨 성고문사건과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다시 김근태씨 고문사건에서 배상판결이 나오면서 사법부의 고문근절 의지가 확고함을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이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85년 9월 사건이 발생한 이후 6년 4개월 동안 끈질긴 법정투쟁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싸워온 김근태씨의 의지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과 교도관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받고 그 영혼과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되어 앞으로 그 상처와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은 경험적상 쉽게 인정될 수 있다"며 "국가 는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가 이번 소송에서 손해청구 원인으로 제시한 △불법구금 △고문 △가속 및 변호인의 접견교통 제한 △고문증거물의 탈취·인멸 등 네 부분 가운데 고문 관련 부분을 모조리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위자료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해 이번 판결이 상급법원에 가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85년 9월4일 오전 5시30분께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에 의해 강제연행된 뒤 6일까지 경

## 공권력 가혹행위 근절의지 보여

## '접견제한'인정 현재결정 어긋나

찰의 구속영장없이 구금됐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다가 같은달 25일 뒤늦게 제시하는 등 '불법구금'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기간 동안 수배중인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이근안 경감과 김수현 경감 등 관련 경찰관들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자백을 받기 위해 10차례 이상 김씨에게 물고문·전기고문 등 엄청난 가혹행위를 했음도 인정했다.

김씨는 경찰관들이 당시 "우리는 너를 깨부술 것이다"라는 폭언을 하며 김씨를 알몸으로 만든 뒤 눕혀놓고 얼굴에 물을 붓는 물고문과, 발가락에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기고문', 또 금속막대를 김씨의 양발에 붕대로 묶고 전기구를 접촉시켜 금속막대의 강한 진동으로 고통을 가하는 '전기봉 고문'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해 11월 고문으로 생긴 발뒤꿈치 상처가 아물자, 상처딱지를 고문의 증거로 삼기 위해 보관했으나 이를 안 교도관들의 강제로 빼앗아 폐기해 고문의 증거물을 인멸한 사실도 인정했는데 이는 고문에 대한 구체적·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불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고문피

해 인정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에 송치된 뒤 진술을 거부했고 담당검사가 증거인멸 및 수사지역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족과 접견을 금지시키고 변호인과의 접견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검사의 불법행위로 돌릴 수 없다며 접견교통제한 부분을 기각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으로,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며 이런 판결은 지난 28일 "변호인 접견시 수사관이 임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번 배상액 4천5백만원이 이 소송 제기 당시 고문경찰관을 특정치 못해 변호인단이 국가를 상대로 냈기 때문에 일단 국가가 배상해야 하나, 고문경찰관이 가려진 시점에서 국가는 고문경찰관에게 구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재판으로 김씨 고문사건이 일단락된 셈이나 김씨를 고문한 경찰관들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데다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은 도피중인 가운데 정작 피해자인 김씨는 90년 전민련 결성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감돼 있어 금전적 보상이 이 시대의 아픔까지는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길우 기자>



# 나라의 책임 묻은 '문명의 상식'

김근태씨 고문에 대한 배상 판결 500

1992. 02. 01

엣그제 사법부가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 김근태씨가 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어쩌면 그것은 공권력의 탈을 쓴 고문자 개개인에 대한 형사적 단죄가 당연히 뒤따라야 할, 고문자들을 관리해온 국가 자체의 민사적 책임을 묻은 법치와 문명의 상식이겠다 하는 생각이 앞선다. 그러한 생각은 동시에, 정보·수사기관들이 공공의 간판을 내건 빌딩 밑실에 숨어 '공안'을 앞세워 수많은 시국관련 인사와 양심수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해대던 광기의 한 시대에 대한 사법적 경종을 듣는 엄숙함과 겹친다. 이와 같은 착잡함은 이 판결이 우리의 인권사상 참으로 고통스럽게 길이 기억되어야 할 3대 고문사건, 곧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과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뒤이은 김근태씨 고문사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사실상 매듭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는 이번 판결에서 사법부가 보여준, 인간이기를 포기한 야만의 고문행위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원인으로 제시된 불법구금, 고문, 증거물 탈취 등 고문관련에 대한 김씨의 주장을, 과거의 비슷한 재판에서 흔히 들던 '구체적 물증이 없어...' 운운하는 구실을 달지 않고 폭넓게 받아들인 점에 깊이 공감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다만 재판부가 김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검찰 조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한 대목은 바로 그에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도 어긋나는 판단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의 이런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년여를 끌어온 재판 진행에 대해 유감

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김씨가 '남영동 분실'로 끌려간 것은 85년 8월24일 비내리는 새벽녘이었다. 박종철씨가 물고문으로 살해된 바로 옆 방에서 그로 하여금 '죽음의 강'을 넘나들게 한 물과 전기의 그 참혹한 고문에 법의 첫 단죄가 내린 것은 6년4개월이 지나서였다. 86년 10월 김씨가 나라를 상대로 낸 소송 또한 그로부터 5년3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김씨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받고 그 영혼과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됨"을 인정하고 "고문으로 생긴 상처막지를 교도관들이 강제로 빼앗아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걸린 5, 6년의 세월은 누가 보아도 터무니없이 길기 때문이다.

아무튼 나라가 고문 피해자에 대해 4천5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고문이 없어진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남영동'은 장소를 옮겼지만 밀실의 가혹행위에 대한 말쑥은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왔기 때문이다. 2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의 도피행각이 수사기관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고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음 또한 분명하다. 고문 경찰관들이 특사로 풀려나고, 불구속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마당에 '고문의 상처와 충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옥에 묶여 있는 김근태씨의 기막힌 처지가 이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고문의 망령이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노력과 결단이 참으로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 김근태씨 조기석방 요청

### 미 케네디센터 간부일행

1992. 2. 15  
 캐리 케네디 부오모 회장 등 미국의 로버트 케네디 센터 간부 일행은 14일 외무부를 방문해 반기문 미주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수감중인 김근태씨를 빨리 석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반 국장은 "오는 5월 형만기로 출소할 예정이며, 김씨 면회는 행정법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고문기술자 이근안씨

### 민가협 현상금 올려

1992. 2. 22  
 민주화운동청년동맹(회장 김정숙·54)은 21일 김근태씨 고문사건으로 수배된 이근안 전 경감에 대한 민가협의 자체현상수배 4주년을 맞아 정부당국에 "이씨의 도피행각에 대한 방조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씨를 조속히 검거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2백만원이었던 현상금을 3백만원으로 올렸다.



남쪽에 있는 로버트 케네디기념 인권센터는 최근 駐美한국대사관의 공식발언을 문제삼으며 韓國정부의 「食言」을 비난하고 있다.

記者의 눈

로버트 케네디기념 인권센터는 한국정부의 「食言」을 비난하고 있다. 로버트 케네디기념 인권센터는 한국정부의 「食言」을 비난하고 있다.

탁했다. 문제는 이 편지에 대한 대사관측의 답장에서 비롯됐다. 대사관측은 김씨가 오는 5월에 서방되기 때문에 김씨의 서방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訪韓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駐美대사관의 「失言」

알고 있던 이 단체는 김씨의 구속기간이 형기의 서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확한 서방날짜 등을 알아보기 위해 대 표단을 서울로 보냈다. 그러나 서울의 외부부와 법무부에서 확인해본 결과 김씨의 서방날짜는 8월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김씨의 서방날짜를 5월로 말할 리는 없다. 문제는 김씨 대사가관이 밝혔듯이 법무부와 외부부의 연락상 차유라는 데 있다. 두 부서의 업무처리상 거리가 이같은 사안조차 착오가 생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 아니면 김씨의 신병처리에 대해 부서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숨겨져 있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워싱턴=南贊淳〉



고문기술자 추적 소설

「늑대를 찾아서」 작가 趙漢柱씨

「고문기술자 추적 소설」은 1992년 1월 11일 문지오 자신의 별칭인 白根安(백근안)을 주인공으로 한 趙漢柱(조한주)의 소설이다. 이 책은 趙漢柱의 1992년 1월 11일 문지오 자신의 별칭인 白根安(백근안)을 주인공으로 한 趙漢柱(조한주)의 소설이다.



李경감 권력비호아래 도피 암시

李경감은 國家協동 재야단체의 尹錫진 추경에도 불구하고 4년 5개월간 머리카락 하나 드러내지 않고서 趙漢柱의 권력비호아래 도피 암시를 하고 있다. 이 소설은 어디까지나 현상이기는 하지만 인간을 동물다루듯 한 주인공이 활개치며 살아가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趙漢柱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책을 보게된다면 자신의 과오를 좀더 확실히 깨닫고 자수할길 빌뿐이라고 말했다.

【黃相軫기자】





케네디인권상 참석뒤 귀국한 김근태씨

1992. 12. 08.

# 대선의미 13대보다 훨씬 커

## 국민 정치견해 표명금지는 위헌...헌법소원 낼 터



재야의 공정선거 감시활동 등 주도하다. 당국으로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소환장을 받은 상태인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집행위원장 김근태(45·사진)씨가 미국에서 열린 케네디인권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8일 귀국했다.

정부쪽에서 국민회의, 전국연합 등 재야의 공정선거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데, 최근 수사당국은 재야 구성원들이 으레 민자당을 반대할 것

이란 예단만을 토대로 실제 위법 행위를 했다는 근거도 없이 압수 수색 등 무리한 조처를 일삼고 있다.

- 현행 대통령선거법에 대한 국민회의의 입장은, = 현행법은 정치과정에서 국민의 의사와 참정권을 배제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위헌으로 국민회의는 8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낼 계획이다. - 정부와 국민당 또는 현대그룹과의 금권선거 시비에 대해 어

떻게 보는가. = '법적제재'가 형평을 잃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 재야의 젊은 지도그룹 인사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보나. = '87 대선'에 비해 국민들의 열기는 낮으나 그 의미는 5년전에 비해 매우 높다.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이런 시점에서 경쟁적 정치적 세력이 공명한 절차를 통해 집권하는 경험을 우리

사회가 축적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정경유착과 부패의 사슬을 끊고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이 정치허무주의에서 벗어나 투표장에 꼭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인우 기자>



金權泰씨 만기出所  
내일 홍성교도소서  
지난 90년 국가보안법위  
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  
고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  
이던 전민총련의장 金權泰  
씨(44)가 12일 오전 만기 출  
소한다.



# '고문 기술자' 이근안

1993. 2. 08

## 누가 숨겨주고 있나



장막 뒤에 숨은 이근안 전 경감. 그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6공초기 정체가 드러난 '고문 기술자' 이근안(55) 전 경기도경公安분실장이 세상의 눈을 피해 종적을 감춘 지 4년2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이 전 경감의 소재에 대해 세간에 알려진 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 간간히 그가 안전가옥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거나 해외로 도피하지 않았겠느냐는 밀도 끝도 없는 소문만 돌았다.

이씨가 이렇듯 완벽하게 몸을 감출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그를 철저히 외부세계와 단절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 일반인들은 어렵지 않게 '권력'을 지목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해괴한 일'은 가능치 않기 때문이다.

### 당국 미온자세 눈총

경찰 관계자들도 이런 추리에 대해 굳이 이론을 달러 하지는 않는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뻔한 것 아니냐"며 "윗선에서 그를 비호하지 않는 한 그가 어디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몸을 부지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간부는 이에 덧붙여 특히 대공경찰 내부의 '의리'를 강조하면서 "더군다나 이씨를 '범법자'가 아니라 '희생자'로 여기는 그들의 정서로 볼 때 그를 받아들이줄 공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김근태 전 민청련 의장이 '이름 모를 집고문 기술자'로 지목한 뒤 (한겨레신문)의 추적으로 88년 12월21일 이름 석자와 얼굴이 세상에 알려진 이씨는 이날부터 장막 뒤로 몸을 숨겼다. 5공비리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던 당시 검찰의 총수였던 김기춘씨는 이씨 문제에 대해 "5공비리 척결 차원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검찰과 경찰에 모두 수사전담반이 편성됐지만 초동단계에서 이씨 신병 확보조차 하지 않아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지금껏 수사관들이 이씨를 '잡으려'다녔다는 흔적이라곤 없다. 이씨는 잠적 며칠 뒤 김기춘 검찰총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나는 김근태를 조사한 일조차 없다"면서 "지금 출두해 여론재판을 받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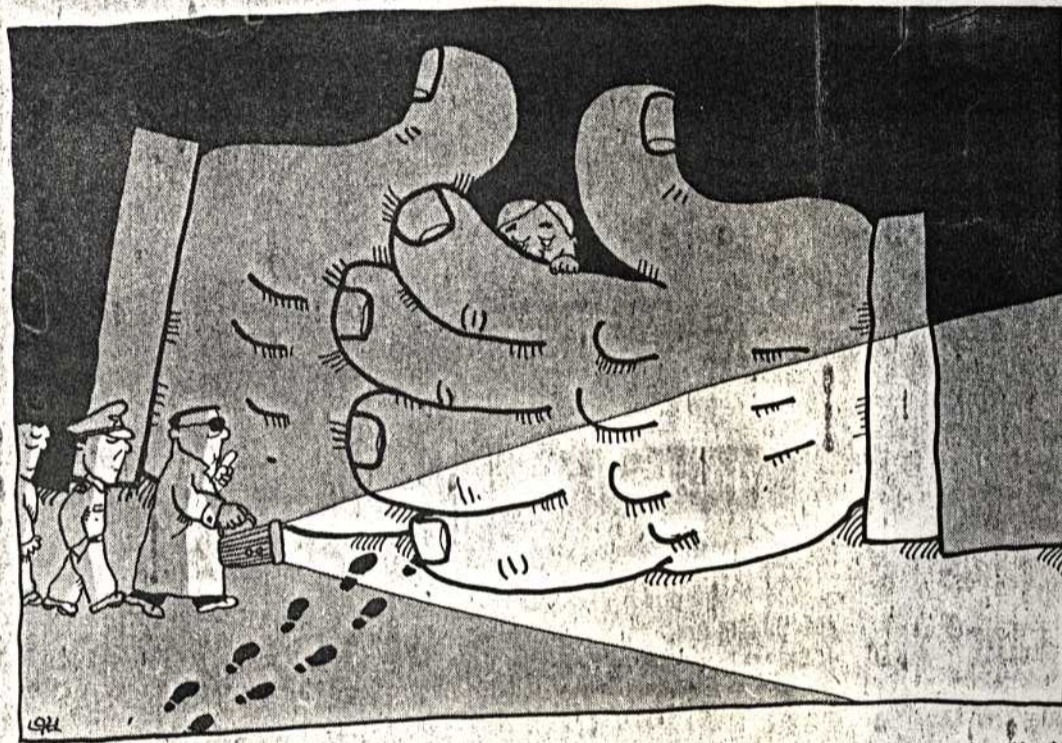
'직장 무단이탈'로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이씨에 대한 그동안의 경찰 수사기록은 '특이사항 없음-계속 수사중'이것이 전부다. 이씨 잠적 초기 검찰 공안부서의 한 간부는 "공산주의자 검거에 혁혁한 공이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빛 때문에 잡아야 하느냐"는 말을 공공연히 하기도 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씨는

과거 (조선일보)가 주는 '청룡봉사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

범법자를 잡아야 할 수사당국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자 재야단체가 현상금까지 내걸고 이씨 검거운동을 벌이는 기현상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구속자 가족들의 모임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애초 1백만원이었던 현상금을 시민성금에 힘입어 3백만원으로 올리고 "경찰이 안잡으면 우리가 잡는다"며 캠페인을 벌였으나 별무소독이었다.

### 재야단체 현상금 추적

이씨의 소재와 관련한 제보가 언론사와 민가협, 야당 등에 여러차례에 걸쳐 들어오기는 했지만 번번이 허탕으로 끝났다. '172cm 정도의 키에 90kg이 넘는 체중, 숄투경처럼 큰손'이라는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고 있던 관심있는 시민들은 제보전화에 인색치 않았다. 신문에 난 사진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경주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에 타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전화 한통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일



# 수배령 50개월 수사 흐지부지

## 권력층서 비호 소문...공소시효 아직도 남아

년 12월 재판에 회부돼 현재 항소심 계류중이므로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형사소송법 253조) 공소시효 만료일이 상당기간 늦춰지게 되는 것이다. 즉 김 전 경감 등에 대한 대법원

대에 취재기자들과 민가협회원, 당시 평민당 당원들이 수십명 몰려들어 일대 소란을 벌였으나 정작 고속버스에서 내린 남자는 얼굴만 엇비슷하게 생긴 평범한 시민이었다. 이씨와 똑같이 생긴 50대의 남자가 경기도 파주의 외딴 농가에 얼마전부터 혼자 산다는 제보를 받은 민가협 회원들과 기자들이 이씨를 '체포'하기 위해 급습했지만 그 남자는 가장불화로 가출한 사람이 확인돼 실소를 머금고 돌아선 일도 있다. 잠적 초기 여수항을 통해 밀항을 한다는 소문이 퍼져 경찰이 여수항 일대를 밤새 뒤지기도 했고, 부산 해운대의 어느 특급호텔에 투숙중인 것을 보았다는 그 호텔 종업원의 제보를 받고 취재기자가 카메라 하나 들고 그 호텔에서 이를 밤을 묵으며 샅샅이 탐문한 적도 있다. 이씨가 평소 피부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부산 동래나 대전 유성온천에 은신중일 거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해 온천단체가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종교단체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리도 나와 입암리에 종교단체들에 대한 탐문도 벌어졌지만 허사였다.

민가협 회원 등 일반인들의 끈질긴 추

적과는 달리 당국의 미온적 태도는 이씨와 공범관계를 이루고 있는 대공경찰관 4명의 재판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 경찰 공범변호 지원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이씨와 함께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수현·백남은·김영두·최상남씨는 자신들의 고문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논의의 초점을 '김근태=공산주의자'쪽으로 몰아가려 했다. 이들 4명의 변호사들은 경찰의 전폭 지원 아래 방대한 자료를, 원용해가면서 사안의 본질인 '고문'을 애써 뒤로 물리고 김씨의 사상문제에 매달렸다. 이들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시대착오적 권력은 이런 논리를 폄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흐림과 동시에, 만에 하나 가혹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체제수호'라는 대의에 비추면 별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2년여를 끈 끝에 이들 4명에게 징역 5년~2년의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 '한

계'를 보였다. 중요 공범 이근안 전 경감이 빠진 상태로 이들의 재판은 항소심에 계류중인데, 오는 15일 결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1부 합의부 판사는 "법정구속 여부를 말할 계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씨의 처 신아무개(53·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씨는 "왜 열심히 일한 그이가 숨어 살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남편과의 연락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했다. 신씨는 자그마한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문을 닫았다.

한편 이씨의 공소시효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애초 알려졌던 92년9월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법 준수 의지 보여야

애초엔 이씨가 김근태씨를 고문한 85년 9월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불법체포·감금 등)의 공소시효인 7년을 따져 92년 9월이면 '상항 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와 공범관계인 김수현 전 경감 등 대공경찰관 4명이 88

확정판결이 언제 이루어질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이씨의 공소시효 만료일 산정도 지금으로선 '어려운' 상태다.

'이근안 문제'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은 이 문제가 다름아닌 사회정의의 문제라는 데 입을 모은다. 이 전 경감으로부터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갖은 고문을 당한 김근태씨는 정치보복적 법집행을 당해 감옥을 열새없이 드나들고, 바로 그 고문자는 법과 관계 없는 삶을 누리는 사회가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회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것이다. 상식을 존중하는 이 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은 이처럼 상식이 짓밟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법을 지킬까" 하는 회의론을 품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이런 법가치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의 의무를 지고 있는 당국이 정확히 제물을 해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그것은 곧 당국이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전 경감을 하루빨리 잡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결론으로 집약된다.

문화권 기자



# “李根安 왜 못잡나”

도피 5년째... 搜查 제자리걸음 중앙 1993. 2. 28

다시는拷問정관 받못붙이게

## 文民정부서 꼭 斷罪해야

前民青總의장 金權泰씨를 고문한 혐의로 88년이후 수배중인 前京畿도청 공안부장 李根安(55)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촉구되고 있다. 金權泰씨 고문사건은 5공기비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 인권유린사건으로 李根安의 집거와 사법처리를 마땅히 해야만 5공의 마귀를 쫓아 내는 데 한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金씨 고문사건 특별전자인 金昌國서울지방법원장 회장의 『최소한의 인권보호법』로 지방 고문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고 사 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신정부의 책무라고 도치할 수 없다. 추진으로 李根安 고문사건의 세 위주인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2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 4부(辛光斗부장)는 관할 서울대문경찰서 및 검거반을 동원, 월 2, 3차례를 로 서울開浦洞 및 龍頭洞 가동주변 수사 大田 연고 선 釜山 친·인척연고선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계속 중이나 뚜렷한 단서조차 찾지 못한 채 수사가 공전되고 있다.

◇공소시효 2년인 공소시효가 7년인 특별법외 가중처벌법(반형의)을 법체포·감금 등을 받고 있는 연은 기간엔 공소시효가

종단 상 태로 검찰은 잠정적으로 李根安의 공소시효를 97년 8월로 설정해 놓고 있다.

◇金權泰씨 고문사건 5공기비리 「林鍾煥」고문치사사건 「權仁淑」양성고문사건과 함께 3대 인권유린사건의 하나로 불려오고 있다. 88년 9월 4일 3대 권력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된 金씨가 감금된 26일 검찰의 구속을 촉구한 뒤 23년간 11차례의 불기소과 전기교류를 당했다. 李根安은 2000년 고문사건을 인정하고 무죄의 처분을 내렸으나 5공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 대 전수사에 착수했다.



# 수배5년... 李根安 안잡나 못잡나

## 제자리 맴도는 檢·警 수사

前민정청의장 金權泰씨 에 대한 추측은 ▲단독은신  
를 고문한 혐의로 지난 88  
년 12월 24일 이후 수배를  
받고 있는 前경기도경공안  
부실장 李根安(55)은  
이디에 숨어있는가.



李根安씨

다  
결합도 수사전담반을 편  
성 서울을 비롯, 안산성  
남시와 고양·파주군 등 李  
씨의 연고지 동원파악에  
주최실천기동대응협의회  
집영을 계속 수사중이라  
어딘가에 숨어있을 가능성  
은 거의 없다고 본다  
검찰·경찰과 별도로 李  
씨의 행방을 쫓고 있는 「민  
간」의 힘도 동원되고 있다.  
방1칸에서 마나아들16  
고(2)과 申씨 두사람만이  
남아있다.

「빨강이 잡는데 현직인 남  
편을 왜 범죄자로 모느냐」  
고 항변했다.  
수배중인 李씨명의로 돼  
있는 미용실의 전화는 전  
화국확인결과 매달 전화요  
금이 2만~3만원대를 고  
르게 유지, 시외·국제전화  
사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93. 3. 01 해외도피·사망가능성" 추측만 公訴시효 44개월 남긴채 단서도 못찾아

前민정청의장 金權泰씨  
살사례로 꼽히는 「고문가  
술자 李根安」사건도 있다  
라 풀릴지 새삼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이는 李前의  
원의 경우처럼 수사기관의  
「마음만 먹으면」 체포할 수  
있을지라는 기대가 증폭되  
고 있기 때문이다.

전담반을 편성,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  
지검 현사 4부 辛光玉부장  
은 「해적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재보가 없는 점을 그  
동양의 수사결과로 미뤄  
李씨는 국내에 없거나 사  
말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담반을 편성,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  
지검 현사 4부 辛光玉부장  
은 「해적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재보가 없는 점을 그  
동양의 수사결과로 미뤄  
李씨는 국내에 없거나 사  
말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살고 있다. 큰아들(33)과  
둘째아들(31)은 모두 다니  
던 직장을 그만둔 뒤 다시  
새직장을 얻어 근무하며  
각각 따로 살고 있다.  
李씨의 부인 申씨는 「남  
편이 집을 나간 뒤 4년 3  
개월동안 단 한번도 연락  
받지 않아 공소시효가  
종료된 상태」

살고 있다. 큰아들(33)과  
둘째아들(31)은 모두 다니  
던 직장을 그만둔 뒤 다시  
새직장을 얻어 근무하며  
각각 따로 살고 있다.  
李씨의 부인 申씨는 「남  
편이 집을 나간 뒤 4년 3  
개월동안 단 한번도 연락  
받지 않아 공소시효가  
종료된 상태」

살고 있다. 큰아들(33)과  
둘째아들(31)은 모두 다니  
던 직장을 그만둔 뒤 다시  
새직장을 얻어 근무하며  
각각 따로 살고 있다.  
李씨의 부인 申씨는 「남  
편이 집을 나간 뒤 4년 3  
개월동안 단 한번도 연락  
받지 않아 공소시효가  
종료된 상태」

살고 있다. 큰아들(33)과  
둘째아들(31)은 모두 다니  
던 직장을 그만둔 뒤 다시  
새직장을 얻어 근무하며  
각각 따로 살고 있다.  
李씨의 부인 申씨는 「남  
편이 집을 나간 뒤 4년 3  
개월동안 단 한번도 연락  
받지 않아 공소시효가  
종료된 상태」

살고 있다. 큰아들(33)과  
둘째아들(31)은 모두 다니  
던 직장을 그만둔 뒤 다시  
새직장을 얻어 근무하며  
각각 따로 살고 있다.  
李씨의 부인 申씨는 「남  
편이 집을 나간 뒤 4년 3  
개월동안 단 한번도 연락  
받지 않아 공소시효가  
종료된 상태」

살고 있다. 큰아들(33)과  
둘째아들(31)은 모두 다니  
던 직장을 그만둔 뒤 다시  
새직장을 얻어 근무하며  
각각 따로 살고 있다.  
李씨의 부인 申씨는 「남  
편이 집을 나간 뒤 4년 3  
개월동안 단 한번도 연락  
받지 않아 공소시효가  
종료된 상태」

살고 있다. 큰아들(33)과  
둘째아들(31)은 모두 다니  
던 직장을 그만둔 뒤 다시  
새직장을 얻어 근무하며  
각각 따로 살고 있다.  
李씨의 부인 申씨는 「남  
편이 집을 나간 뒤 4년 3  
개월동안 단 한번도 연락  
받지 않아 공소시효가  
종료된 상태」

살고 있다. 큰아들(33)과  
둘째아들(31)은 모두 다니  
던 직장을 그만둔 뒤 다시  
새직장을 얻어 근무하며  
각각 따로 살고 있다.  
李씨의 부인 申씨는 「남  
편이 집을 나간 뒤 4년 3  
개월동안 단 한번도 연락  
받지 않아 공소시효가  
종료된 상태」

살고 있다. 큰아들(33)과  
둘째아들(31)은 모두 다니  
던 직장을 그만둔 뒤 다시  
새직장을 얻어 근무하며  
각각 따로 살고 있다.  
李씨의 부인 申씨는 「남  
편이 집을 나간 뒤 4년 3  
개월동안 단 한번도 연락  
받지 않아 공소시효가  
종료된 상태」



# 검찰, 李根安 "검거特命"

수배 4년만에 전담반 극비 편성, 재수사 1983. 3. 16

조선

## 전국 친인척·연고지 탐문 추적

## 도피 비호세력 규명 초점

『코뮌기출자 李根安을 반  
드시 검거하라.』



◇4년 3개월째 도피 중인 前경기도경 공안 분실장 李根安경감.

성, 前민청련의장 金權泰 씨를 고루한 혐의로 4년 3개월째 전국에 지명수배중인 前경기도경 공안분실장 李根安(58)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 4부는 지난달 20일 사건의 전담재수사에 착수, 수사 1과 수사관 20명으로 특

별검지전담반을 구성하는 한편, 수사기록과 李씨의 인사기록카드 등 관련자료에 대한 정밀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담반은 특히 李씨의 후처인 申모씨(48)와 막내 아들(18)이 살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주소지와 충남 논산에 거주하는 장남(34), 경기도 안산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차남(31) 등 직계가족과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친인척 30여명의 주변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반은 또 李씨가 피부 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 착안, 전국의 유명온천에 정 보원을 투입하는 한편, 지난달 말에는 변장을 한 李씨가 볼포를 치러 다닌 다는 제보에 따라 서울근교의 10개 볼포장에도 현장 잠복조를 배치하고 있다.

검찰은 李씨가 수배를 전후해 '이종중'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李씨가 성형수술을 한 다음 합법적인 신분증을 얻어 제3자 행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담반의 관계자는 "그 동안 전담반의 연거푸 등 에 협조장부, 또는 정보원을 투입하여 단서를 찾았다고 노력했으나 아직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며 "그러나 李씨가

분명히 살아서 국내 어떤 곳에 숨어있다는 확신이 있어, 특별수색반을 꾸리 씨를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권선부 출범에 따라 추진 중인 '90년 사건'과 관련, 張世東전안기부 장을 구속한데 이어 李씨 검거에 나선것은 5공시절의 대표적 인권탄압사건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석돼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배일에 가려졌던 가혹행위의 실체와 함께 李씨의 도피를 돕는 비호세력이 있는지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李씨의 장기간 도피생활은 비호세력의 도움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해 왔었다.

70년 검찰에 투신한 李씨는 84년 검찰총장과 함께 경기도청 공안분실장으로서 근무하면서 金權泰씨 등을 가혹하게 고문한 혐의(독지폭행 등)로 88년 12월 24일 검찰에 지명수배됐다. 李씨는 수배조후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진우해 제쳤으나 검찰이 출국단계를 李씨의 신변보호조치하지 않아 출현의혹을 불러일으켰었다.

안, 전국의 유명온천에 정 보원을 투입하는 한편, 지난달 말에는 변장을 한 李씨가 볼포를 치러 다닌 다는 제보에 따라 서울근교의 10개 볼포장에도 현장 잠복조를 배치하고 있다.

검찰은 李씨가 수배를 전후해 '이종중'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李씨가 성형수술을 한 다음 합법적인 신분증을 얻어 제3자 행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담반의 관계자는 "그 동안 전담반의 연거푸 등 에 협조장부, 또는 정보원을 투입하여 단서를 찾았다고 노력했으나 아직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며 "그러나 李씨가 분명히 살아서 국내 어떤 곳에 숨어있다는 확신이 있어, 특별수색반을 꾸리 씨를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권선부 출범에 따라 추진 중인 '90년 사건'과 관련, 張世東전안기부 장을 구속한데 이어 李씨 검거에 나선것은 5공시절의 대표적 인권탄압사건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석돼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배일에 가려졌던 가혹행위의 실체와 함께 李씨의 도피를 돕는 비호세력이 있는지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李씨의 장기간 도피생활은 비호세력의 도움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해 왔었다.

70년 검찰에 투신한 李씨는 84년 검찰총장과 함께 경기도청 공안분실장으로서 근무하면서 金權泰씨 등을 가혹하게 고문한 혐의(독지폭행 등)로 88년 12월 24일 검찰에 지명수배됐다. 李씨는 수배조후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진우해 제쳤으나 검찰이 출국단계를 李씨의 신변보호조치하지 않아 출현의혹을 불러일으켰었다.



# 검경, 이근안씨 검거나서

1993. 3. 31

검찰과 경찰이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 이근안(55) 경감을 검거하기 위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30일 이제까지 형사 4부에 수사관 4명으로 구성돼 있던 이씨검거전담반을 해체하고 강력부(유창종 부장검사) 홍준표 검사 지휘 아래 13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씨 주변인물과 연고지 등을 폭넓게 파악해 수사관들을 현지로 내려보냈으며

경찰에 편성되는 이씨검거전담반의 수사상황을 종합지휘하기로 했다.

유창종 강력부장은 "검거반원들에게는 다른 업무를 맡기지 않고 이씨 검거에만 주력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씨 주변인물들에 대한 다각적인 접촉과 정보파악을 통해 밀도있는 수사를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이날 전국 일선경찰서와 파출소에 보낸 전문통신문을 통해 "이씨에 대한 형식적인 수사를 지양하고 친·인척과 동창 등 연고지 탐문수사와 사찰·압자·은



천장 등 이씨가 은신할 만한 곳의 검문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사설

### 이근안은 잡고 '시국 수배'는 풀라 1993. 4. 01

요즈음 이근안이라는 이름이 다시 언론을 타고 있다.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를 비롯한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고문함으로써 '인간백정'이라는 별칭을 들던 그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갑자기 시작된 것이다. 검찰은 검거전담반을 편성했고, 경찰도 '이근안 잡기'에 나섰다고 한다.

경기도경 대공분실의 경감이던 이근안씨가 남영동에서 김근태씨를 죽임 직전까지 몰고갔던 '고문기술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88년 12월 20일이었다. 그때 검찰과 경찰은 그가 몸을 숨긴 뒤 마지못해 수배를 하고는 4년 하고도 석달이 지나도록 잡아들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김근태씨를 고문한 경관 4명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고문을 당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이근안씨는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언론은 수사기관들이 일부러 그를 잡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곤 했다. 보다 못해 재야 운동단체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현상금을 걸고 이근안씨를 '수배'하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는 그동안 팔장을 끼고 있던 검찰과 경찰이 왜 갑자기 '이근안 검거'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는지 그 동기를 알지 못한다. 새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을 위해 고문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인가?

어쨌든 고문기술자는 붙잡아서 법으로 응징해야 한다. 김근태씨가 쓴 글을 보면 그 '인간백정'이 8명의 경관과 함께 자행한 고문은 이런 것이었다. "담요에 들들 말린 채 발목, 무릎, 허벅지, 배, 가슴이 칠성대 위에 꿰뚫어 묶여졌다. 눈은 가려지고 코와 입에는 두꺼운 노란 수건이 씌워졌

다. 머리는 약간 뒤로 젖혀지고, 두 사람이 양 옆에 서서 힘껏 눌러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수도 샤워꼭지와 주전자에서 물이 '썩'하고 내리꽂혀왔다. 물속에 익사할 때의 고통과 공포 속으로 처넣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물고문과 함께 전기고문까지 했다고 한다. 전두환 정권 때 박종철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바로 남영동의 고문자들이었다.

이근안씨는 지난 여러해 동안 전혀 수사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야말로 '유유하계' 시간을 보내온 것 같다. 가족은 그의 안부를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도피자금을 누가 대는 듯하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는 인상과 체격이 아주 특이해서 다른 수배자들보다 도피에 어려움이 많을 터인데도 오래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과 경찰이 그가 있을 만한 집들을 뒤지고 검문과 검색을 강화해서라도 잡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이근안씨를 잡는 일에 못지 않게 서둘러야 할 일은 시국 관련 수배를 해제하는 것이다. 민가협이 조사한 것을 보면 6공 들어 사전구속영장이나 수사기관의 내부수배에 쫓기는 '거리의 양심수'는 1백여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지난번 사면·석방 조치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그래서 새 정권이 외치는 개혁과 화합이 수배자들과 가족에게는 한낱 공허한 선전구호로 들릴 것이다. 그 뒤에도 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수배를 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새 정권이 강조하는 '6공과의 차별성'이 실득력을 가질 리가 없다.

거듭 말하지만 고문기술자는 빨리 잡아 단호하게 처벌하고 시국 관련 수배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 金權泰씨 개혁 제한協力 선언

文民 4.19 日 在野진로 피력

재야세력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金權泰씨(46)가 金泳三대통령 새정부의 개혁을 일정한 부분 지지하면서, 제한적인 협력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다.

金씨는 또 재야운동권 내부의 대내외적 여론을 신랄한 비판을 가해 양이념이론을 둘러싸고 유능한 지도자를 찾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신촌동 4월 19일 열린 4월 19일 16일 열린 4.19혁명 20주년 기념대회에서



金權泰씨

金씨는 「국민 4.19를 맞은 민족민주운동의 진로란 제국의 발제의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씨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이 5.16 쿠데타 이후 강화돼온

의 정치 이념을 주의로 규정하는 추세일 경우 민간과 관련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개연성 저지할 수 있는 동동권이라고 정부에 대한 비

## 국민 70% 이상 지지... 과수 운동권 방향도 비판... 일대

서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金씨는 金泳三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정책에 대해 「金泳三그들의 일정한 변화와 개혁을 부인하지 않으나, 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 70% 이상의

확대되고 심화돼야 하며 민중세력인 비판적인 기초위에서 이 추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야 민족민주

운동의 체제적 비틀림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金泳三정부가 갖

고 있는 개혁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국민 70% 이상 지지하고 있는 金泳三정부가 갖

고 있는 개혁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국민 70% 이상 지지하고 있는 金泳三정부가 갖

고 있는 개혁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국민 70% 이상 지지하고 있는 金泳三정부가 갖



### 政治무관심?

당민 金權泰씨 강연장

4월 19일 3시 漢城大 대강당에서는 민족민주운동 열풍을 일으킨 재야운동가 金權泰 前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이 4월 19일 3시 漢城大 대강당에서 강연을 했다. 金씨는 「국민 70% 이상 지지하고 있는 金泳三정부가 갖

의 정통적인 지지자들 등에 입각한 현정부의 개혁을 정확히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생각해보려는 뜻이 담겨 있었다. 金씨는 또 「국민 70% 이상 지지하고 있는 金泳三정부가 갖

고 있는 개혁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국민 70% 이상 지지하고 있는 金泳三정부가 갖

《李光炯기자》



# 金權泰씨 개혁 제한協力 선언

文民 4.19 맞은 在野진로 피력

재야세력의 핵심인물  
로 꼽히는 金權泰씨  
(46)가 金泳三대통령  
새정부의 개혁을 일정한  
부분 지지하면서, 제한  
적인 협력[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주었다고 있  
다.



金權泰씨

金씨는 또 재야운동  
권 내부에 대해 이례적  
으로 신랄한 비판을 가  
해왔으며 이를 둘러싸  
고 유교적인 분위기와  
이로 인하여, 시골 등  
수출 중심의 산업에서  
4월호연연구소(소장  
尹善소)주최로 16일 열  
린 '4.19 재야연대전  
주최'이란 토론회에서

서 이런 견해를 제시했  
다. 金씨는 金泳三대통령  
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  
정책에 대해 '金泳三그  
를의 일정한 변화와 개  
화를 부인하지 않으며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고 전체 70% 이상의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민중세력은 비판적인  
기조에서 이 추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야 민족민주  
운동의 체제정비를 통  
해서만 이를 달성할 수  
있고 金泳三정부가 갖

폭압적 국가기구를 일  
부 축소시키면서 불로  
소득위의 또아리를  
어은기득권세력에게  
일정한 타격을 가함으  
로써 대중의 관심을 집  
중시키고 있다'고 분석  
했다.

金씨는 이어 현정부  
의 정치이념을 신보수  
주의로 규정하고 '신보  
수주의는 정세가 악화  
될 경우 민간과소로 전  
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  
고했다.

이런 개연성을 차단  
하지할 수 있는 세력이  
운동권이라고 말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주  
로 운동권 내부에 방지에  
한 것임을 시사했다.

김씨는 '이 국민운동체  
의 일부 또는 상당한 역  
량'을 제도정치권에 진  
출, 수권이 가능한 국민  
정당을 창설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 국민 70% 이상 지지... 과소평가 안해 운동권 방향도 비판... 일대대쟁 예고

1993. 4. 19

金씨는 이와 함께 87  
년 이후 운동권의 상대  
적 약화를 인정하고 그  
원인으로 '중간계층을  
주요 타격방향이로 실  
정, 정치적 모험주의로  
내닫게 되었고 대중속  
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  
다.

金씨는 '이 국민운동체  
의 일부 또는 상당한 역  
량'을 제도정치권에 진  
출, 수권이 가능한 국민  
정당을 창설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金씨의 운동권내에서  
의 위치를 고려할 때 그  
의 이러한 주장이 앞의  
로 재야의 운동방향과  
관련 일대대쟁을 불타  
일킬 것으로 보인다.

金씨는 민주투사와  
과격주의자라는 이미지  
를 함께 지니고 있는 대  
표적 재야인사로 대선  
까지만 해도 정당결성  
또는 제도정치권 진입  
을 거부한채 전후연합  
과 민주당의 정책연합  
을 통해 金大中후보를  
적극 지지했던 이들이  
(李光炯기자)



# 김근태씨, 고문사건 승소

1993. 7. 08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7일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4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문에 책임을 지고 4천5백만여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85년 9월 당시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김수현(59)씨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당했다며 86년 10월 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

소돼 1심에서 징역 5~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현씨 등 4명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金權泰씨 고문 警官 넷 선고공판**  
**法廷구속 여부 주목**

85년 민주위사건과 관련, 金權泰씨를 고문한 혐의로 법원의 재정결정으로 재판에 회부된 前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 金秀顯 피고인(59) 당사 경감(등) 경찰관 4명(이하 항소심 선고공판이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金大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은 이들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할지 여부 가 주목된다.

金 피고인들 85년 9월 당시 민청련의장이던 金씨를 서울남영동 대공본실로 연행, 11차례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한 혐의로 처분을 받았으나 88년 12월 서울고법에서 金씨와 변호인들이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됐으며 金國煥 변호사가 특별검사를 맡았



# 김근태씨 고문경관 항소심서 법정구속

김수현씨등 4명 3년~1년6개월 선고 500

85년 민주위사건과 관련해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47)씨를 고문한 혐의로 법원의 재정결정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 모두가 항소심에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관련기사 14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3일 1심에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김수현(59·전 대공수사단 소속 경감)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불법체포감금) 및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백남은(58·경정), 김영두(55·경위), 최상남(46·...)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 등 4명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김수현씨 등은 91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근태씨가 고문을 당했다는 서울 남영동 대공본실은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였으므로 양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관들이 고문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김씨가 대공본실에서 검찰로 송치된 직후의 정황과 김씨의 구체적 진술,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쪽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金秀顯 前경감



◇白南殷 前경정



◇金永斗 前경위



◇崔商南 前경위



23일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전 대공수사단 김영두 경위·백남은 경정(왼쪽) 구속돼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범죄가 수사에 집착한 나머지 저질러진 행위라는 점과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해온 점

서울고법 「고문경관」 4명 법정구속  
1993. 8. 24  
조선

고문할 때 원상회복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입방죄(입방형으로 법정이수하는 관행)에 따라 전원 구속키로 했다. 85년 9월 「서울대 민주위 사건」을 배후조종했다는 이유로 김근태씨를 남영동 대공본실로 연행, 11차례에 걸쳐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88년 12월 변호인들을 이 번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呂始東기자△



# 김근태씨 고문경관 항소심서 법정구속

김수현씨등 4명 3년~1년6개월 선고 500

85년 민주위사건과 관련해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47)씨를 고문한 혐의로 법원의 재정결정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 모두가 항소심에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관련기사 14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3일 1심에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김수현(59·전 대공수사단 소속 경감)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불법체포감금) 및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백남은(58·경정), 김영두(55·경위), 최상남(46·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 등 4명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김수현씨 등은 91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근태씨가 고문을 당했다는 서울 남영동 대공본실은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였으므로 양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관들이 고문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김씨가 대공본실에서 검찰로 송치된 직후의 정황과 김씨의 구체적 진술,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쪽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23일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 경감·최상남 경위·김영두 경위·백남은 경정(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이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범죄가 수사에 집착한 나머지 저질러진 행위라는 점과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해온 점

등을 참작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춘다"며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고문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씨가 85년 삼민투를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혐이 확정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수현씨 등과 함께 고문에 가담했던 이근안 전 경감은 현재 수배중에 있다.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1심형량). △김수현=징역 3년·자격정지 2년(징역 5년·자격정지 5년) △백남은=징역 1년6월(징역 3년 6월) △김영두=징역 2년(징역 2년6월) △최상남=징역 1년6월(징역 2년)



# 5공의 대표적 인권침해사건으로 불리던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고문사건 관련경찰관 4명 모두에 대해 서울고법이 23일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 것은 밀실수사와 고문관행에 대해 책임을 박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1993. 8. 24

## 고문경관 법정구속 배경과 의미

### 구체적 물증없는 정황 인정 판결 큰 의미 이근안 전경감 잡혀야 5공실상 알려질듯

5공의 대표적 인권침해사건으로 불리던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고문사건 관련경찰관 4명 모두에 대해 서울고법이 23일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 것은 밀실수사와 고문관행에 대해 책임을 박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1심법원이 고문경관에게 중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않은 것과는 달리 이날 재판부가 전원 법정구속 조치를 내림으로써 고문에 대한 응징의지를 하급심보다 더욱 강력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고문경관의 유죄를 이끌어낸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특별검사)인 김창국 변호사는 "비록 형량은 낮아졌지만 피고인들을 전원 법정구속한 것에 법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며 높게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고문사건과 마찬가지로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데다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해자(수사기관)와 피해자간의 상반되는 두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유죄여부에 관심이 모아져왔다.

고문사건의 이런 특성때문에

동재정권 아래에서 고문이 자행돼왔던 측면이 큰만큼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고문재발을 막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0여 차례에 걸쳐 물고문·전기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측 진술과 "뺨 한차례 때린 적도 없다"는 피고인측의 전면적인 부인진술을 놓고 "김근태씨가 치안본부에서 검찰에 송치된 직후의 여러정황과 김씨의 구체적인 진술 등으로 볼 때 피고인측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상흔 등 물증을 내놓기 어려운 고문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이 객관적·구체적 진술과 정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물증이 없으면 아무리 법정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해도 믿어주지 않는

다"며 고문을 자행해온 일부 수사기관원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또한 5공정권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7년 11개월, 고문경관이 재판에 회부된 지 4년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겨우 2심절차까지만 마쳐진 상태여서 우리나라에서 고문 입증과 고문자 처벌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와 함께 검찰과 사법부의 굴절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도 꼽히고 있다. 지난 86년 1월 김씨의 변호인단은 고문경관을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87년 1월 관련경찰관 모두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도 변호인단이 이에 불복해 같은해 2월에 낸 재정신청사

건에 대해 처리를 미루다 6공이 출범한 뒤인 88년 12월에야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경찰관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등 온갖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검찰수사를 통해 고문행위를 밝히는 '정상적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사건발생 3년여만에 내려진 법원의 재정신청채택 결정에 따라 임명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특별검사)가 뒤늦게 시작한 수사를 통해 가까스로 고문이 입증되는 '비정상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권인숙씨 성고문사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함께 5공의 3대 인권침해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김근태씨 고문사건은 비록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날 사실심까지 마무리된 데다 지난 7월 김씨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서울고법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민·형사상으로 마무리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당시 김씨에 대한 고문을 주도했던 이근안 전 경감이 아직 도피중이기 때문에 5공정권아래에서의 고문의 정확한 실상은 아직도 가려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재열 기자**



# 實名制로 도피자금줄 차단

## 李根安씨 검거 쉬워졌다

假名계좌 통한 입출금 어렵워

잠적생활 제약...행적 노출될듯

8.25.100  
1993. 8. 25. 100  
檢警 적극추적 나서야

전민靑聯의장 金權泰씨  
(47)고문경찰관 4명이 모두  
실형선고와 동시에 법정구  
속되고 고문기술자(前경  
기도경찰안본실장 李根安  
씨(55)의 고문가담사실이  
인정돼 李씨 검거문제에 관

심이 진통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숨어 살던 李씨는  
비호세력으로부터 전탈되  
는 각종 도피자금을 차  
단, 李씨의 노출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어 검찰·경찰  
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  
다면 소재 파악 및 검거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



◇李根安씨

사이다.  
民家協會 재야단체는 불  
론 입선수사관할도 李씨가  
88년 12월 24일 잠적 이후 4  
년 8개월 동안이나 장기 잠  
적할 수 있는 것은 비호세  
력으로부터 도피자금과 은  
신처를 제공받고 있기 때  
문이라고 보고 있다.  
검·경이 그동안 미정전

을 운영하던 李씨 부인과  
사업을 하는 처남, 검거안  
산시업대에 거주하는 친인  
척들을 상대로 도피자금제  
공 여부를 수사했으나 별다  
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재정담사  
李씨로부터 「은혜」를 입  
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정청」은 검찰·경찰  
에 지명된 전·수감형이  
아닌 경기도와 다른 도지사  
「홍·기·민·정」의 부를  
판단한다. 「부」를 중의해  
판정하기 전 「민정청」은 사  
타를 통해 수감형인 「부」  
의 영기가 아직 「민정」  
계 간섭과 있다.  
또 李씨가 하수인을 이  
양해 비실명계좌에서 도피  
자금을 인출하거나 노피조  
기 제공을 꾀한 것이  
판정되면 영구정형이 부여  
될 수 있다.  
다만서 검찰·경찰은 「부」  
의 비호인이나 추종인인 사  
들의 자기보호를 주장, 정  
기인출금의 원인을 중립적  
자나 인출금인 10월 12

일이후에도 실명화가 되지  
않은 계좌를 추적한다면  
李씨 검거가 불가능하지만  
은 「부」가 지명이다.  
도피자금이 「부」를  
李씨가 가족이나 친지,  
과거 정권에서나 「부」의  
및 정권에서 지명된 「부」  
를 판정하면 「부」를 중의해  
판정하기 전 「민정청」은 사  
타를 통해 수감형인 「부」  
의 영기가 아직 「민정」  
계 간섭과 있다.  
또 李씨가 하수인을 이  
양해 비실명계좌에서 도피  
자금을 인출하거나 노피조  
기 제공을 꾀한 것이  
판정되면 영구정형이 부여  
될 수 있다.  
다만서 검찰·경찰은 「부」  
의 비호인이나 추종인인 사  
들의 자기보호를 주장, 정  
기인출금의 원인을 중립적  
자나 인출금인 10월 12

【黃相軫기자】



# 김근태씨사건 수사검사 문책 여론

## 문민정부 검찰 다시 태어나야

1993. 8. 28.

### 고문 '무혐의' 배재욱검사 청와대 근무 김씨 기소한 김원치검사도 사실 덮어

서울고법이 지난 23일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전직 경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킴에 따라 당시 고문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당시 담당 검사들이 현재 검찰 및 청와대의 요직을 맡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당시 직무에 따른 책임을 물어 새 정부 아래서 검찰이 환골탈태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87년 1월 김씨의 부인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고문경관 및 수사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담당 특수부 검사는 배재욱 검사로, 현재 청와대에 파견돼 민정수석실 사정2비서관으로 있다.

배 검사는 86년 중반 김씨가 수감돼 있던 강릉교도소를 찾아 김씨로부터 직접 고문 사실을 들었으나 "증거가 없다"며 이를 외면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86년 초 김씨의 '남영동 고문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고발장이 접수되자 서울지검(당시 정구영 지검장)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특수부 검사였던 김성호 검사(현 대검 중수4과장)가 사건을 떠맡았으나 6개월 가량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배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배당은 특수1 부장으로 재직중이던 김태정 현 대검 중수부장이 맡았다.

85년 8월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김원치 현 서울지검 총무부장도 김씨의 고문사실을 덮어둔 검사로 꼽히고 있다. 회하고사 고문당한 사실을 확인한 뒤 86년 1월 김 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 검사는 김씨를 구속시킨 이후 "김씨를 수사하는 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가족면회금지를 요청해 약 3개월간 김씨와 외부의 접촉을 전면 차단하기도 했다.

당시 김 검사를 지휘한 최환 공

안1부장은 현재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중이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배재욱 검사는 "당시 김씨로부터 진술을 들었을 때 심정적으로 고문 사실을 인정할 만했으나, 기소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또한 당시 치안본부 수사관들이 고문 사실을 전면 부인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의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밝히고 있다. 배 검사는 이어 "아름답지 못한 기억으로, 시대적인 흐름속에서 조직의 일원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원치 검사는 "김근태씨 부인의 고소에 따라 담당경관관을 조사했으나, 모두 고문 사실을 부인해 증거법적 관점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당시 조사를 받는 사람 대부분이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곤 해 김근태씨 고문 사실을 특별히 문제를 삼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이어 "김씨가 조사를 받는 당시 한달 가까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참고인 조사에 수사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가족면회를 막았다"고 밝혔다.

한편 재야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법 판결을 검찰이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당시 고문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대한변협의 한 변호사는 "경찰의 불법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이 고문을 막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끔찍한 고문 행위를 비호 은폐하고 더 나아가 고문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찰 이근안<sup>93</sup> 검거 소극적

## 수사비 다른 미해결사건보다 훨씬 적어

1993. 10. 09  
경찰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씨를 검거하기 위해 지금까지 들인 총 수사활동비가 다른 주요 미해결사건 수사비에 비해 훨씬 적은 3천9백여 만원으로 나타나 경찰의 수사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청이 8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씨가 전국에 지명수배된 88년 12월 이후 4년8개월 동안의 수사비는 모두 3천9

백82만원으로 월평균 6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기도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에는 86년 12월 수사본부 설치 이후 6년8개월 동안 월평균 6백43만원씩 5억1천5백만원이 수사비로 쓰이는 등 주요 미해결사건 12건의 수사비가 월평균 4백만원으로 이씨 검거 수사비에 비해 5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12건의 미해결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해 전담

반을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이씨 검거에는 형식적으로만 경기경찰청 외근 형사 10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한 채 일반업무를 함께 맡겨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3. 10. 29 동아

金權泰씨 처벌 구제  
유엔人權委에 신청  
趙炳煥변호사는 28일 정  
부가 전전민권위원회장  
金權泰씨(46)를 국가보안  
법위반혐의로 처벌한 것은  
「시민의 정치참여권 침해  
에 대한 국제인권협약에  
위배된 부당한 처사라며  
유엔인권위원회에 구제신  
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趙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한국정부가 지난 91년 4  
월 金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1항과5항을 적용,  
유죄를 확정판결한 것은 표현  
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제19조2항을  
위반한것」이라고 주장했다.



5년째 못잡는 「拷問기술자」李根安

# 洪準杓검사가 검거 나섰다

## 검찰 수사전담반 신설 지휘

### “국민의혹 해소위해 명예결어”

중앙 1993. 11. 15



洪準杓검사



李根安

「고문기술자」李根安을 잡  
아라.」  
서울지검 강림부 洪準杓  
검사(38)가 수배 5년째  
인前경기도청 공안부장  
李根安(55)검거를 위  
해 나섰다.  
서울지검은 15일 국민  
들의 의혹·불신 해소가

원 수사를 맡았던 洪 검사  
가 5공 시절 대표적 인권  
「6공 황태자」朴哲彦의  
원 수사를 맡았던 洪 검사  
가 5공 시절 대표적 인권

말사사례인「고문기술자」李  
根安을 잡아 대공수  
사관 출신 수사전문가와 맞  
대결을 펼치게 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고문기술자는 85년 金權  
등이 시작했으나 구체적으  
로 李根安이라는 이름이  
알려진 것은 정치상황이  
크게 바뀐 88년 12월.  
金씨는 85년 9월 4일  
부터 26일까지 23인등안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학생운동 배후조종자를 대  
라며 불고문 두차례 전기  
압명을 날리고 있었다.

고문 여덟차례 등 모두 열  
번의 고문을 당했다며 李  
씨를 독진폭행 혐의로 검  
찰에 고소했다.  
金씨의 외에도 79년 남민  
전, 80년 반제동맹사건 때  
등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복역한 판관  
자들도 李씨를 고소했다.  
「외제가방에 고문도구를  
채워 나다」 「장의사 사업  
이 제철을 만났다」고 며  
들며 동등적 혐의를 가했  
다. 「등 李씨의 고문수법  
은 당시 재야운동권에서는  
악명을 날리고 있었다.

李씨와 함께 고문에 가  
담했던 前치안본부 대공수  
사단 金秀顯(경정) 등 고문경  
관 4명은 88년 12월 서울  
고문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대  
법원에 항소중이다.  
그러나 李씨는 최근 기  
술자답게 재정신청이 받  
아들여지지 않자 잠적, 5  
년이 된도록 흔적을 드러  
내지 않고 있다. 공개된  
수사 단서라고는 인사기록  
카드 사진 한장과 키 1m  
70cm, 몸무게 90kg 정도의  
진장한 체격이라는 특정  
뿐. 검찰은 경기검찰청의

근원사 10명으로 수사전담  
반을 편성해 서울동대문구  
올림픽 가동초원과 부산  
진·이천 연고선릉에 대한  
소재 수사를 계속해 왔으나  
매달 「특이사항 없음」 계  
속 수사 중 「이런 전황 진  
정이 없다」.

이 때문에 한때 「못잡  
는 게 아니라 안잡는다」 경  
황이 돌렸다고 봐준다는  
등의 흠을 사기도 있었다.  
李씨에게 적용된 특정법  
죄 가중처벌방지의 불법체  
포 잡달죄의 경우 공소시  
효는 7년으로 92년 9월까  
지. 그러나 재정신청을 낸  
87년 4월 이후 공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공소  
시효가 중단된 상태다. 을  
해 연달해 대법원에서 공  
범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99년 5월까지 시효가  
남게 된다.

「검찰 내부까지 수사해야  
했던 슬롯머신보다는 훨씬

가변운 마음입니다. 李씨  
를 걸었습니다」  
洪 검사는 15일 李씨 사건  
지폭력 사건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비호세력을 캐어  
잡지요. 李根安을 검거하  
는데 수사사무소의 명예  
다. <崔相淵기자>

가변운 마음입니다. 李씨  
를 걸었습니다」  
洪 검사는 15일 李씨 사건  
지폭력 사건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비호세력을 캐어  
잡지요. 李根安을 검거하  
는데 수사사무소의 명예  
다. <崔相淵기자>



分類: 707 권역: 1993. 11. 16 所載: 1면 1면

『고문기술자 李根安결합 사진첩을 찾습니다』  
홍준약검사 수사로 일약 「스타」가 된 서울지검 간행부 洪準杓검사(38)가 수배 5년째인 前경기도청 공안부장 李根安(55)의 집사에 나서는 그의 사진을 애탁해 찾고 있다.



문화일보

사진촬영기피증 때문인지 아니면 편향을 對共수사관으로 일하면서 특정한 용의주단한 때문인지 李根安은 88년 12월 수배당시 중앙일보 인사카드에 불어 있던 우표만한 증명사진 의뢰는 단 1장의 사진과 남기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洪준약은 이번주부터

# 李根安 다른사진 찾아라

## 검거나선 洪準杓검사 제1과제

결적으로 李根安의 집사의 반이 서울지검에 설치된 편이 있었으나 그의 인상착의를 알릴만한 제대로 된 사진을 얻어 애를 겪고 있다. 그러나 李根安은 합계 일하던 경찰관들과 다른 우려했던 대공수사관 생활을 통해 특정한 범신술의 鬼才. 따라서 마음만

### 남기건 인사카드 증명사진본 연장수서 스님까지 변신鬼才

먹이면 연장수에서 스님으로 또 발음한 신사로서 자유자재로 變身할 수 있는 그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제 적었는지 도 잘 모르는 증명사진은 현재의 李根安 모습과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 洪준약의 추정이다. 지난 4월 洪준약을 주입 검사로 하는 「李根安 검사

발견이다. <李相鎬기자>

## 李根安씨 공소시효 만료일

# 99년 8월까지 예상

고문기술자 李根安결합 12월중순 선고공판 따라

1993. 11. 11  
고문기술자 李根安결합(수배중)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올해 안으로 확정된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金碩洙 대법관)는 15일 李根安과 함께 85년 9월 金權泰 당시 민청연의장을 고문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실형을 선고받던 李根安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으나 최초사건이 발생한 85년 9월 4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87년 1월 20일 金權泰씨측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이후 自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르렀던 12월 14일에 열기로 했다.  
이와 따라 수배중인 李根安의 공소시효는 99년 8월 24일 또는 99년 9월 12일로 만료된다.  
李根安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으나 최초사건이 발생한 85년 9월 4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87년 1월 20일 金權泰씨측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이후 自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르렀던 12월 14일에 열기로 했다.  
이와 따라 수배중인 李根安의 공소시효는 99년 8월 24일 또는 99년 9월 12일로 만료된다.  
李根安의 공소시효는 7



















分類番號

10322

日字: 1993. 12. 24

所載: 40 版

面: 2P

이아

# 고문기술자 李根安

# 오늘로 수배 5년째



특별수사반 洪準杓검사 “기필코 잡겠다”

도망자 李根安 전철감 (55) 24일부로 정확히 수배 생활 5년째를 맞는다. 고문 경찰 李根安 지금 어디에 숨어 있나.

지난 89년 12월 24일부터 전민청련의장 金權泰씨 불법체포 및 고문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기 시작한 李根安 양은 5년여를 더 도망다녀야 법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李根安의 공소사실(7년)만 보면 지난 87년 1월 10일 문경관 4명의 유죄가 상고선에서 확정된 것을 고려했을 때, 계산하면 오는 99년 8월 16일. 그러나 李根安에게 고문당한 남부오부 金

성화씨 등 2명이 지난 86년 2월 李根安을 상대로 내재 정신장애 아지도 재판기록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이 달란질 수 있다.

경찰인 서울동대문구용 두 2층의 李根安과 연고지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李根安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수사 단서가 없기에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李根安의 잠적 이후 행적에 대해 추측이 분분하다. 한 검찰수사관은 李根安이 도피생활중인 극도의 좌절감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살했을 수도 있고 잠적조

## 자살-日밀항說 등 무성...부인 “생사만이라도 알고싶다”

기밀문으로 밀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다.

李根安의 행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만이 관할이 있는 것일 것이다.

“민주화실천가협의회”의 회근도 지난 89년부터 李根安 검거를 위해 현상금 3백만 원을 내걸고 수배전단과 스티커 수십만장을 전국의 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李根安의 가족들도 李根安의 행방을 아타게 찾고 있다.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며 막내아들(16·고2)과 단둘이 살고 있는 李根安의 부인 申모씨(54)는 남편의 잠적 행위를 5년동안 단 한번도 연락이 없었다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월부터 서울 지검 검찰부 2,3호 수사관 10여명으로 특별수사전담반을 구성, 李根安 검거에 나선 洪準杓검사는 李根安이 누군가의 비호를 받지 않고서는 5년동안의 도피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며 비호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면 李根安 검거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洪검사는 또 李根安의 자수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술못머신수사로 이름을 날린 洪검사는 “고문경찰관 李根安 과거 정통성을 결여한 정부의 폭압적 공안 통치의 또 다른 희생자”라면서 “하지만 인간성을 말살하는 고문행위 근절시키기 위해 李根安을 기밀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尹聖勳)



# 「李根安 비호세력」 추적

## 검찰 수사자료분석 검거박차

구립21일 金權泰前民青 聯의장을 고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치안본부대장 金秀賢(57)이 4명의 유죄가 확정된 뒤 이들과 관련이 5년째 수배중인 고문기술자「李根安前경기도경 曹安분실장(56)의 공소시효가 재개됨에 따라 검찰이 李씨 검거에 고삐를 단기고 있다.

金前장관의 유죄확정 이후 그 동안 중지됐었던 李씨의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되고 있다. 99년 8월 이후엔 李씨를 검거해도 독자

박하다고 장정결정을 내리고 동맹들의 비호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검찰은 李씨가 오랜 대공수사관 생활을 해온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

### 「對共」팀 유대강해 은신처·돈 제공 가능성 사망·해외밀항·독립행동설은 '의박' 판단

체제를 정비하고 李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지검전담부는 지금까지 李씨 관련 수사자료 중 90% 정도 보고하고 있다. 또 대공수사비밀유지를 위해 타살행위를 가능케도 조신스레 제기되고 있다. 대공수사관들이 다른 조직으로 변신, 이면조직이라

과도 달리 유대가 강하다. 나 탈환한 변화들과 은신처를 감안할 때 이가 설노거의 배제되었다. 고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5년동안 잠적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관 10명으로 추적수사반을 편성, 李씨 동태를 대상으로 밀착수사를 하면서 李씨에게 제공된 자금전출처를 수사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검찰은 李씨가 직장을 갖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에서 비호세력이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관 10명으로 추적수사반을 편성, 李씨 동태를 대상으로 밀착수사를 하면서 李씨에게 제공된 자금전출처를 수사할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검찰은 李씨가 과거 대공수사과정에서 알게된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도시 근교에 잠적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공수사조직이 동료 수사방법을 강구중이라

검찰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가 李씨 도피를 돕고 있다면 검거가 어렵」의박하다. 李씨가 재발로 걸려가지 않을 수 없도록 주변부터 죄인들가는 수사방법을 강구중이라 고 밝혔다. 李永奎 기자

1994. 1. 0 8



50-고문

김근태씨 손해배상 확정

1994. 10. 08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7일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4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가 지난 85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김씨에게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경찰관의 불법행위와 고문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만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인현 기자

다시 더 李根安을 잡소동

추진결과 허위제도 판명



인고문·결찰  
관 李根安  
감독 목적했

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이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  
느라 한차례 소동.

마산경찰서는 지난 26  
일 경찰청 통영군 무지도

두시터에서 李根安과 비  
수한 의문의 한 남자가

누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  
를 받고 출동한 뒤 해경

찰서에 수사협조를 의뢰  
하고 형사들을 파견하는

등 법선을 띄웠으나 제보  
자가 트럭 운전수인 것을

기변자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나고 동행 위

제보도 판명됐다.

이외에도 경찰관에게 자

는 '장렬사건'이 었파란

전경찰이 진정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같은 허위신

고 계속 접수돼 일어난

데 환심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허

위 신고를 하는 제보자에

대해 원천의 무소식.

<부산>